

○ 칼럼

전기소비자를 위한 전기요금 현실화



장 한 경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 연구위원

지난해 국제 유가와 석탄가격의 급상승에 따른 원가상승요인을 전기요금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한전은 3조원에 가까운 사상 최초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전기요금 산정기준을 제대로 적용하였을 경우에 예상되는 전력판매 수입과 비교하여 한전의 전기판매 수입 결손액은 한전수입의 약 20%에 근접하는 6조원에 달한다.

국제유가는 다행히 작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수그러든 상태로 한때 배럴당 30달러대까지 추락했지만 최근 들어 다시 상승세를 타면서 70달러 선을 돌파 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은 1/4분기에만 9천억원 정도의 당기순손실을 나타내면서 여전히 적자 상황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작년과 마찬가지로 발전회사로부터 구입하는 도매전력 가격보다 낮은 수준에서 전기를 팔고 있어, 전기 판매량이 늘수록 한전의 적자도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전은 경영실적 악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력감축까지 포함한 자구노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하

고 있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과도하게 낮은 요금으로 인한 손실 폭은 자구노력으로 보전할 수 있는 범위를 크게 벗어나 있어 재무구조의 악화에 따른 한전의 신인도 하락과 자금조달비용 상승이라는 부작용은 이미 나타났으며, 앞으로 예상되는 설비투자위축은 안정적 전력공급의 차질을 야기하면서 장기적으로 소비자의 편의를 해손하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

한편 원가 이하의 낮은 전기요금은 에너지수급구조의 왜곡을 가져와 국민경제에 큰 부담을 주고 있으며, 설비투자를 수반하는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라는 점에서 상당히 오랜 기간 그 여파가 지속될 전망이다. 국제유가가 상승하기 시작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각종 에너지가격과 소비량의 증감율을 보면 경유와 등유의 가격은 이 기간중 각각 94%와 59%나 올랐으며, 소비량은 각각 21%, 60% 감소하였다. 반면 전기는 지난 5년 같은 기간 동안 요금이 5% 오르는데 그치면서, 소비는 26% 증가하

였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여러 에너지 중에 최고급 에너지에 속하는 전력의 가격이 정부의 과도한 규제로 인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한 투입연료 가격보다 열량당 가격이 낮은 상황에서 이러한 전력의 과소비 현상은 당연한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삼야난방용, 농사용, 산업용 전기요금은 석유류 가격에 비해 지나치게 낮아 가정은 물론 공장, 화훼시설, 축사까지 전기로 난방을 하는 전력과소비가 나타나고, 이를 충당하기 위해 밤시간에도 값비싼 천연가스를 사용해 전기를 생산해야 하는 국가적 낭비가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작년을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 정상적인 요금 수준시와 비교하여 낮은 전기요금으로 인한 과소비로 약 24억 달러의 불필요한 에너지수입이 초래된 것으로 추정된다.

에너지로 전량 수입하는 우리나라에서 낮은 요금으로 인한 에너지과소비는 결국 국제수지 악화와 원화가치 하락 등을 통해 에너지가격 인상압력을 증폭시키고, 경기회복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에너지과소비와 연료 선택의 왜곡에 더하여, 고급에너지를 쓰는 계층이, 그것도 많이 쓸수록 요금 동결의 혜택을 더 크게 받는다는 점은 소비자 간의 형평성 차원에서도 우려할 만한 사항이다. 특히 낮은 산업용요금은 수출입이 자유로운 개방경제 상황에서 한전의 적자가 전력다소비기업의 초과이윤으로 귀착되고, 전력다소비산업이 과도하게 늘어나 언제 닥칠지 모를 에너지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능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과도하게 낮은 전기요금은 공급 측면에서 녹색 에너지산업의 성장기반을 약화시키고, 수요 측면

에서 일반국민의 에너지절약 의지를 약화시키며, 미래성장 동력의 하나가 될 에너지절약기술의 개발과 산업화도 위축시킨다. 향후 온실가스 감축의 무부담이 현실화 될 경우 전력산업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할 온실가스배출 관련 비용부담은 앞으로 나타날 추가적인 전기요금 상승요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잠재적 비용상승분의 반영에 앞서 현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전력공급비용만이라도 제대로 반영하는 요금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하고, 산업구조를 적정화하며,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 도모하기 위한 선결과제라 할 수 있다.

세계경제가 불황의 터널에서 빠져나올 즈음이면 국제 에너지가격이 현재보다 더욱 높은 수준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몇 년의 예로 보아 국제유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시기에 오히려 해외 자원개발 등 에너지 자주공급능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력산업을 에워싸고 있는 연관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경기진작 차원에서도 전기요금 현실화를 통해 전력산업의 투자여력을 확충해야 한다.

적정수준으로의 전기요금 인상이 단기적으로 소비자에게 손해인것처럼 잘못 비쳐지는 것에 대한 과도한 정치적 고려를 배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선진국의 사례에 비추어 전기요금개정 절차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좀 더 장기적이고 거시적 관점에서 소비자 편익을 제고하기 위해 다음의 전기요금조정은 소비자가 수용할 수 있는 최대한의 폭으로 원가에 접근시켜야 한다.